

‘5월 운동’ 과 5·18 기념사업 그리고 기념공동체

정호기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좀더 나은 삶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민중들의 저항이 전개되어 왔다. 이런 저항 행위들을 ‘민주화운동’ 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가는 이견이 있지만, 민주화운동들이 매우 다양한 기억 상태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4월 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중항쟁(이하 5·18), 6월 민주항쟁 같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운동사의 기록에서 관심을 갖고 탐색해야만 확인되는 사건들이 있다. 그리고 기록되거나 공식화되지 않아서 관련자들의 추억 속에만 남아 있는 사건들과 망각 혹은 희미한 흔적만을 가진 채 역사 속에 묻힌 사건들도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 다양한 상태에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초적 사건이 갖는 특성, 즉 사건의 발생 규모와 파급 효과이다. 여기에는 운동의 이념과 목적, 지속성, 희생자의 규모, 운동 수단, 목적달성 여부 등과 관련된 특성들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원초적 사건을 기억하려는 힘과 활동이 있었는가, 즉 ‘기억투쟁’(Struggle of Memory)이 있었는가이다.¹ 과거의 사건이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원초적 사건의 특성에 못지 않은,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의 역동적인

정치·사회적 운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기억투쟁으로 좁혀보면, 앞서 언급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사건들이 모두 정치·사회적으로 저항적 기억투쟁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²

이런 측면에서 볼 때, 5·18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쟁점으로 한 '5월 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월 운동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에서 발생했던 민주화운동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가적 차원의 활발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했던 중추 동력이었다. 5·18이 1980년 5월의 약 10여 일간 광주와 전남을 배경으로 전개됐다면, 5월 운동은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해 학살의 주요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까지 전국적으로 계속됐다. 또한 5·18은 5월 운동이라는 기억투쟁을 통해 국가와 지배집단에게서 부정되고, 망각이 강제되던 민주화운동 혹은 민중항쟁이 '과거청산'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식화·역사화되는 과정을 담은 지침서라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5월 운동의 성과는 노태우 정권 아래에서 가시화됐고, 문민정부 아래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³ 5·18에 대한 일련의 과거청산 프로그램은 '민중성의 제도화 혹은 박제화'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국가와 지배집단에 맞선 5월 운동의 성과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기반 위에서 있다. 즉,

1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기억'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회상과 수축(Deleuze, 1996: 67~68), 배제, 선택 혹은 강조(김영범, 1998: 180~184) 등을 통해 매우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는 궤적을 그린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억은 개인이 지닌 기억의 정신적 영역에서 고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혹은 정치적 지평에서 논의되어야 한다(Boyarin, 1994).

2 저항적 기억투쟁은 잠재적이거나 비가시적인 형태로, 때론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에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증폭된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억투쟁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통 결과론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3 주요 쟁점별로 보면, '피해보상'은 노태우 정권의 집권기인 1990년도에 처음 이뤄졌고, 문민정부의 집권기였던 1993년에 두 번째로, 그리고 국민의 정부의 집권기였던 1998년에 마지막 보상이 이뤄졌다.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정 및 보상받은 5·18 관련자는 사망자가 154명, 행방불명자가 65명, 상이 후 사망자가 94명, 상이자 3천59명 등 총 4천5백40명이다. 이 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들이 1만8백7명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단일 사건으로는 실로 엄청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책임자 처벌'은 1995년 11월 제정된 '5·18특별법'에 의거해 그 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노태우·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일단락됐다. '기념사업'은 피해보상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정권하에서부터 발표 및 논의됐지만, 결국은 문민정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5월 운동의 가장 핵심 과제였고, 광주문제 해결의 실질성을 말해주는 '진상규명'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책임자 처벌'은 이벤트화됐다.

어떤 형태와 수준이었든 5월 운동이라는 역동적 힘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5·18에 대한 기억과 역사적 평가가 일정하게 합의되고 정형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거나,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5·18에 대한 기억이 상이할 것이라는 점은 5·18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위하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5월 운동의 대치선들이 '기억과 망각'이라는 대립구도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18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고, 기념사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저항적 기억투쟁 집단 내에 존재한 5·18에 대한 기억이 매우 다양하며, 기념사업을 위해서는 5·18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 가운데 특정 기억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크게 보면, 5·18과 5월 운동을 전개하던 당시의 5·18에 대한 기억과 기념사업의 과정에서 선택된 5·18에 대한 기억이 각각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누가 혹은 어떤 세력이 5·18의 기념사업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가를, 즉 기념사업의 주체 또는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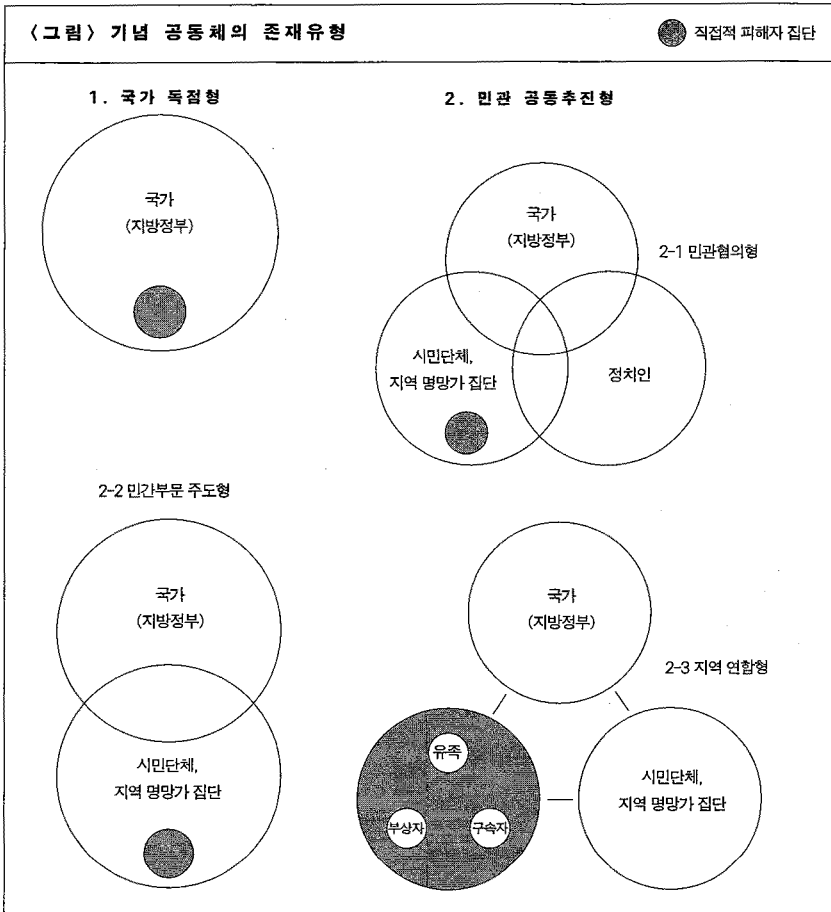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사회적 운동으로 등장한 기억투쟁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5월 운동과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체들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공동체의 구성과 특성들을 먼저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5·18 기념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및 형성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등장한 쟁점과 갈등,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4 기념사업은 크게 유형적 기념사업과 무형적 기념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역사성과 장소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당시를 기념하는 공간과 상징물들을 만드는 것이며, 후자에는 기념 정신에 대한 학문적·문화적 작업을 주로 하는 연구소, 장학재단, 문화예술기금, 도서관에 대한 투자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는 유형적 기념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5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들은 원초적 사건이 특정한 지역과 결속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형성이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직적 틀을 갖추는 것만으로 기념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즉, 기념사업의 추진 조직에 포함된 사람들의 특성, 이를 둘러싼 다양한 부분들의 인적 자원과 지원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가 등이다.

민주화운동 기념공동체의 구성과 특성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은 대부분 ‘기념사업회’ 혹은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념공동체에 의해 구성됐다. 이렇게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기념사업 대상과 행위가 정치적·사회적 상징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거의 필수적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사건이 발생했던 주요 지역에서 형성된 조직들과 집단들이 참여해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⁵⁾이런 의미에서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세력들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정



리할 수 있다. 기념공동체는 원초적 사건의 발생적 특성, 기념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특성, 소요 자원의 확보 방법, 기억투쟁 집단의 존재 유형 등에 따라 다른 구성과 특성을 보여준다. 5·18 기념공동체가 어떤 구성과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과정에서 등장한 기념공동체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등장한 기념공동체의 주요 구성 주체는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 직접적 피해자 집단, 시민단체, 지역 명망가, 중앙 및 지방 정치인 등이었다. 이외에도 기억투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학생이나 노동자, 농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기념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후자가 배제됐다. 기념공동체는 저항공동체와 달리 합의와 타협을 고려하는 조직이며, 국가와 직접적 피해자 집단의 주장이 주요하게 관철되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민주화운동들이 민중들을 원초적 사건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으나, 기념공동체는 계층적 혹은 계급적 범주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이나 지역의 여론 주도층들이 주요 구성인자가 됐다. 분명한 사실은 국가 혹은 관 주도성이 강한 기념사업일수록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기념공동체의 등장 가능성이 낮으며, 민간 부문의 주도성이 강할수록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좀더 열린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기념공동체 내부에서도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기념공동체를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기념사업을 독점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다시 기념공동체에 참여하는 주체와 조직 구조에 따라 민관협의형, 민간부문주도형, 지역연합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국가독점형은 말 그대로 국가 혹은 관 주도성이 강력하게 관철되는 경우이다. 이는 기념사업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저항적 기억투쟁의 결과라기보다는 국가가

6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란 오늘날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집단들 일부와 재야단체 및 사회운동단체 등을 의미한다. 물론 명망가 집단의 대다수가 이런 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소속된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지는 않으므로 따로 분류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란 원초적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 피해자 집단 및 명망가 집단을 제외한 민간단체들을 의미한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우리가 오늘날 지칭하는 시민단체라는 개념이 한참 사회적 힘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므로, 재야단체 혹은 사회운동단체들이 기념사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포섭적 대체의 차원에서 제기한 경우에 발견된다. 이때의 기념사업은 원초적 사건이 지닌 저항성을 탈각시키고, 제도권 내로 포획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4·19혁명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4·19혁명 기념사업의 기념공동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4·19모지 공모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직접적 피해자 집단의 대표와 건축 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실제 기념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서울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팀이었다. 이런 형태로 4·19혁명 기념사업이 진행됐던 것은 국립 4·19모지의 조성 사업이 문민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관공동추진형 가운데 민관협의형이다. 이런 기념공동체에는 앞에서 언급한 주체들, 즉 국가 혹은 지방정부와 직접적 피해자 집단 및 시민단체, 지역 명망가 집단, 정치인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기념사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쟁점에 따라 이들간의 힘 관계와 구성비율은 달라졌지만, 보통 중요한 발언권을 갖고 협상의 대상이 된 집단들은 직접적 피해자 집단과 지역 명망가 집단이었다. 즉, 민관공동추진형은 국가독점형과 비교할 때, 저항적 기억투쟁의 결과물이거나 기억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저항적 기억투쟁의 강도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 민관협의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5·18 기념사업을 들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셋째, 민관공동추진형 가운데 민간 부문의 주도성이 좀더 중요하게 관철된 민간부문주도형이다. 민간 부문의 주도성이 보장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념사업을 민간 부문이 태동시키고, 이를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념공동체에 참가하는 주체들의 구성은 두 번째와 유사하지만, 시민단체 및 지역 명망가 집단의 의견이 좀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이 구성됐다. 즉, 기념사업 대상이 국가에게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시기부터 기념사업을 통한 저항적 기억투쟁을 전개하면서 기념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산에서 이뤄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이 그 대표적인 형태인데, 좀더 일반화된 유형적 특성과 다른 점은 직접적 피해자 집단의 발언권과 힘이 독자적 범주로 설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직접적 피해자 집단들이 기억투쟁 과정에서 조직적인 세력으로 활동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인이 기념공동체에 포함됐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참여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가 혹은 지방정부, 직접적 피해자 집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연고의 정치인 등이 모두 참여해 기념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역연합형이다. 이는 원초적 사건에 대한 지역 내의 광범한 혹은 절대적 지지가 확보되어 있고, 평가와 의견이 상당 수준 동질화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지역 내의 광범한 세력들과 집단들이 결집한다는 것은 기념공동체가 저항적 기억투쟁 과정 혹은 결과로 결성되기보다는, 처음부터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한 기억투쟁의 형태를 띠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3·15의거 기념사업이 바로 이런 형태를 보여주었다. 다만 이 형태에서는 다른 기념공동체들과 달리 정치인의 힘이 중요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지방정부와 정치인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과 집단을 포함하는 것이며, 현실 정치의 이데올로기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직접적 피해자 집단의 주장과 의견은 독자적인 혹은 중요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들이 소수였으며 기억투쟁 과정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18 기념공동체의 형성과 특성

기념사업의 목적과 지향 그리고 내용이 어떤 집단과 조직에 의해 주도됐는가는 “기념사업의 추진 주체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제2장에서 언급한 유형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념공동체에 대한 경계와 비판의 의미를 지닌 가장 대표적인 평가는 ‘관 주도’, ‘당사자 집단 주도’, 그리고 ‘명망가 집단 주도’였다. 기념공동체가 지닌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평가들은 다소 상이한 이유들을 근거로 도출된 것이지만, 시민 혹은 대중이 기념사업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 저항공동체 중심의 기념사업

전두환 정권은 5·18을 전혀 재평가하지도 않은 채 시종일관 ‘폭도들의 무장난동’이었다는 견해를 유지했고, 5·18을 주제로 한 반정부 집회와 시위는 매년 5월을 정점으로 해 가일층 확대되어갔다. 특히 5월 행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 비합법적인 형태를 띠었고, 격렬한 집회와 시위가 주요 내용을 이뤘다. 그러므로 5월 행사에는

지역의 모든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총망라됐고, 5·18의 역사적 의의와 왜곡된 진상을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5월 행사는 제4주기까지만 해도 희생자 가족, 시민, 학생 등이 망월묘역에서 위령제를 어렵게 개최하고, 곧바로 시위를 전개하는 형태였다. 이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5·18 광주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이하 5추위)가 결성됐다.⁷ 당시 5추위는 지역 내 저항공동체의 결집체였다. 직접적 피해자 집단들인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등 수 많은 단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5추위는 5·18 기념사업 추진을 목표로 설정한 첫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 전까지는 5·18 이후 기념사업에 대한 집단적 관심이 한 번도 표면화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념사업이란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팽배해 있었다. 사실 당시 5·18 기념사업을 제기하는 것은 저항적 기억투쟁으로 격화되고 있던 5월 운동의 진로를 가로막고, 5·18의 어떤 상흔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의의를 희석하며, 그리고 5·18이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종결되는 듯한 인상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러나 5월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저항공동체의 계획은 다른 의미로 해석됐다. 기념사업은 5·18을 부정 또는 망각화하려 했던 전두환 정권의 의도와 달리, 망월묘역과 더불어 5월 운동과 저항적 기억투쟁 그리고 시국관련 집회 및 시위의 상징공간 혹은 기념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았다.⁸ 이 점은 '5·18 광주민중혁명탑' 혹은 '5·18 광주민중탑'을 전남도청 앞 광장 주변에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하겠다는 5추위의 계획에서 이미 예견됐다. 기념사업이 5·18을 상징하는 전남도청과 그 일대를 부지로 선택했다는 장소성, 기념탑 명칭에 '민중혁명'이 기재된 점, 국민의 성금을 모금함으로써 대중적 호소 및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 등은 5월 운동이 기념사업에 의해 침체하기보다는 확대될 개연성이 높았다.

⁷ 1985년 5월 10일 광주 계림교회에서 광주의 재야인사, 지역 명망가 그리고 직접적 피해자 집단의 회원 등 50여 명이 모여 결성한 5추위는 자연스럽게 5월 행사를 주최하는 주요 단체로 부상했다. 5추위는 결성 당시에는 광주 지역의 실질적 중심 재야단체였으나, 1986년부터 점점 분화되기 시작해 결국은 명망가 중심의 조직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⁸ 이 점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설립 조성된 4·19혁명과 3·15의거 기념공간과 기념물에서 확인된다. 사건의 확산을 차단하고 정리하겠다는 박정희 정권의 4월 혁명 기념사업 의도와 달리, 4·19의거와 3·15의거탑 등은 저항적 대중 집회와 시위의 상징 공간이 되어 왔다.

〈표 2〉 5·18 기념사업 관련 주요 발표 및 논의

발표일시	5·18의 명칭	광주문제 치유 방안	기념사업	발표자
1987. 7. 1	광주사태	정부 유감 표명, 유족에게 보훈 연금 수혜, 특별법 제정, 보상	위령탑 건립	노태우 민정당 대표
1988. 4. 1	광주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사망 및 부상자 추가 신고 접수, 유족에 대한 지원, 중앙 현저 혐의기구 설치	망월동 공원화 및 위령탑 건립	노태우 대통령
1988. 11. 26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	구체적인 언급 없음	노태우 대통령
1990. 1. 11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법 제정 (노태우: 기념관 건립은 반대)	상무대 부지의 기념공원 조성	노태우·김대중 영수회담
1990. 7. 3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제정, 보상 규모 인상, 구속자 생활지원 방안 검토	상무대 부지의 5·18 기념공원 조성, 기념탑	노태우 대통령 민자당사 방문 지시
1993. 5. 13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추가보상, 전과기록 말소, 지명수배 해제, 해직자 복직 검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별도의 조치 않기로 함.	망월묘역 확장 및 성역화, 전남도청 이전과 이전 부지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탑 건립, 상무대 부지 추가 무상 양여와 시민공원 조성	김영삼 대통령

5추위의 위령탑 건립 계획은 내적으로는 기금의 사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 및 광주 지역 저항공동체의 운동 방향에 대한 이견과 갈등 등으로, 외적으로는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의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5추위의 기념사업 추진활동은 성과가 있었다. 즉, ‘광주문제 해결의 5원칙’(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 기념사업, 명예회복)에 ‘기념사업’이라는 원칙을 포함시킨 계기가 됐다. 결국, 이는 국가가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 치유책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5추위는 한동안 5월 행사를 준비하는 반합법적 조직이 됐으며, 광주시와 국가독점적 기념사업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2) 관주도적 기념사업

5·18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한 노태우 정권 아래에서도 5·18은 5월 운동 속에 살아 있는 현재진행형인 사건이었다.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전반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의 쟁점에는 거의 대부분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5·18의 존재 자체를 극단적으로 부인했

던 전두환 정권과 달리, 노태우 정권은 5·18과 5월 운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 전두환 정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체제 내화해 반정부 세력을 집결시키는 쟁점을 무력화할 것인가.

노태우 정권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6공화국 이전부터 거론된 적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 민정당 대표의 지위로서 위령탑 건립을 포함한 ‘광주사태 치유방안’을 피력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⁹ 어쩔 수 없는 발표였다고 할지라도, 전두환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학살 책임자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발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전도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4월 1일 ‘광주사태 치유대책’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 5·18에 관해 발표한 두 번째 치유방안과 기념사업에 대한 것이지만, 국가가 처음으로 기념사업을 공식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은 1988년 11월 26일 특별 담화에서 이른바 ‘5공 비리’와 ‘광주문제’ 해결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5공화국과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이번의 조치들을 끝으로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이 차별화될 수는 없었고, 광주문제의 해결은 요원했다. 한편 노태우 정권은 5·18 기념사업 요구를 일단 수용하는 듯 했으나, 대응 방식은 이중적이었다.¹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기념관 건립 문제였다. 노태우 정권은 기념사업을 통해 5·18의 악몽을 제거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만, 5·18의 계승과 저항공동체가 요구하는 광주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¹¹

9 당시 5·18 위령탑을 건립하도록 하겠다는 발표의 의도와 내용은 5추위와 다르겠지만, 5추위의 위령탑 건립 계획이 약 2년 만에 호남의 반정부 정서를 수렴하는 사안으로 인식되어 승인됐다는 점은 중요하다.

10 노태우 대통령은 5·18 기념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나,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정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저항공동체와 직접적 피해자 집단이 제기하는 광주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물군경이나 독립유공자, 더 나아가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나 ‘부마민주항쟁’ 등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추어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무등일보』, 1990. 2. 28), 정부가 제시한 수준에서 광주문제를 종결짓고자 했다.

11 이는 “기념관을 세우면 광주 상처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1990. 1. 11.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노태우 대통령의 청와대 회담)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1990년 당시 민주당의 날치기 통과로 제정된 ‘광주보상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 민주당은 기념탑 및 위령탑 건립과 묘지 조성 등 기존에 노태우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광주시가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정도를 주장하고 있었고(『전남일보』, 1990. 2. 23.), 이 내용을 법으로 제정해 관철시켰다.

〈표 3〉 노태우 정권 당시 5·18 기념사업 관련 주요 대립 구도와 쟁점

		기념사업 선 추진론	기념사업 후 추진론
주요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광주시	지역 출신 정치인, 광주시의회, 관련단체, 지역 내 저항공동체
주요 대립 쟁점	기념사업 외 5월 문제 해결	관심 없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등 요구
	상무대 부지 활용 및 기념사업 방법	망월묘역 인근 3만평에 묘지 및 위령탑 조성. 광주시에 무상 양여한 상무대 부지 5만평에는 기념공원과 기념탑 건립. (기념관 건립은 부정적)	상무대 무상 양여 부지에 묘지를 비롯해 위령탑을 건립. 전남도청에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
	기념사업의 주체	광주시	기념사업 추진 법인체 구성

1990년 7월 14일 민자당의 날치기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무렵부터 노태우 정권은 5·18 기념사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지시와 이 지시에 따른 광주시의 대책 마련 및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5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념사업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 결국 기념사업이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기념사업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갔다.¹² 지역 내 일부에서는 5·18 기념사업을 언급하고 있었으나,¹³ 오히려 현실적인 쟁점은 보상에 대한 문제였다.

노태우 정권 당시 기념사업을 둘러싼 세력들간의 주요 대립구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표 3>을 살펴보면, 광주문제 해결에 있어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선행 과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주보상법’에 근거한 보상과 기념사업을 우선할 것인가로 대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립구도는 초기에는 국가/광주시와 지역 출신 정치인/직접적 피해자 집단/지역 내 저항공동체 사이에 형성됐고, 후기에는 국가/광주시와 광주시의회/직접적 피해자 집단/지역 내 저항공동체 사이에 형성됐다. 광주시의회와 직접적 피해자 집단은 김대중이라는 지역 연고의 정치인을 통해 광주 문제를 정치적

¹² 5·18 기념사업의 내용에 대한 노태우 정권의 최종적 입장은 망월묘역 인근 3만평에 위령탑을 포함한 묘지 조성, 상무대 부지 5만평에 5·18 기념공원과 기념탑 건립 등이었다. 기념관 건립은 끝내 부정적이었다.

¹³ 1988년 5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결성된 <5월 민중항쟁 계승과 진상규명을 위한 범민주세력 공동투쟁위원회>가 발표한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에 ‘전남도청과 망월묘역의 성역화 및 기념탑 건립’이 제 3원칙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9년 1월 5후위가 상무대 부지의 기념공원화 및 묘지조성 등을 주장했다.

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물론, 이들간에도 소소한 입장 차이는 있었다.¹⁴ 일단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 핵심적인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① 기념사업에 앞선 광주문제의 선행적 해결과제, ② 상무대 부지 활용 및 기념사업 방법, ③ 기념사업의 주체 등이었다.

5·18 기념사업은 시민과 대중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광주시는 '묘지정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홀로 기념사업을 추진했고,¹⁵ 협의 수준의 파트너로 고려한 것은 직접적 피해자 집단이었다. 그것도 비공식적 혹은 개인적 채널을 통해 의견을 묻는 수준이었다. 당연히 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다. 게다가 지방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한참 논쟁 중이었는데, 저항공동체는 관주도성에 대한 비판으로 민선시장에 당선된 이후 5·18 기념사업이 추진되길 원했다.¹⁶ 결국 노태우 정권은 5·18 기념사업을 통해 그렇게도 벗어나고자 했던 5·18의 멍에를 끝내 벗지 못했다.

(3) 민관협의형 기념사업

5·18의 직접적 피해자 집단들은 김영삼 정권이 착수한 일련의 '민주화 진전 조치들'에 기대를 걸면서 기념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념사업을 담당할 주체로 공익법인 형태의 '범시민 기념사업 추진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직접적 피해자 집단들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및 5·18 기념사업을 추진했던 기존의 기구, 5·18 관련단체들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념사업을 항구적으로 추진하려 했다(1993. 1. 12.). 이런 상황에서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발표됐다. 광주시는 노태우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홀로 첫 기념사업 대상이 된 '5·18 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지원협의담당관실을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지원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 그리고 광주시민 및 관련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1993. 5. 15.), 그것은 거짓이

14 기념사업 후 추진론은 국가에 의한 기념사업 추진에 좀더 적극적인 입장과 소극적인 입장, 상무대 부지의 묘지 조성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등으로 나뉘어졌다.

15 광주시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근거를 찾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에 의뢰했다. 이 여론조사는 직접적 피해자 집단 및 지역 내 거의 모든 재야단체들에게서 조사의 타당성 및 대표성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지만, 기념사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다.

16 직접적 피해자 집단과 저항공동체 및 김대중 등은 민선시장 선거 이후 다시 기념사업을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지방선거는 1995년에 이뤄졌지만 당시 분위기는 선거가 일박한 것으로 인식했기에, 1992년 중반 이후 기념사업에 관한 논의는 휴지기라고 할 수 있다.

었다. 가장 먼저 광주시와 유족회가 충돌했다. 광주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망월묘역의 성역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광주시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6. 11.), 핵심적인 직접적 피해자 집단들이 참석을 거부했고 겨우 3명의 일반 시민만이 참석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5·18 기념사업이 광주시 홀로 진행할 수 없음을, 그리고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1993년 8월 27일 결성된 <5·18 기념사업추진협의회>(이하 5추협)였다. 5추협은 점차 5·18 기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및 결정 기구로 성장했다. 그러나, 처음 5추협의 성격과 위상은 관주도라는 지역 여론과 비판에 밀려 수동적인 방식으로 광주시 산하에 구성된 시장 자문기구였다. 5추협은 지금까지 일련의 5·18 기념사업을 진행했던 주체, 즉 기념공동체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논쟁을 타협적으로 총결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부산민주공원의 기념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과 매우 대비된다. 부마민주항쟁의 기념사업은 시민과 재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기념사업회가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결합하고, 이것이 '범시민추진위원회'로 발전했다. 반면 5추협은 구성원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민관협의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위원만 있지 회원은 전혀 없는, 지역여론 형성의 중심에 위치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5추협에 참여한 민간 부문은 직접적 피해자 집단과 지역 명망가 집단,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이었다.¹⁷ 초기의 5추협은 기념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광주시가 임의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결정해주는 기구이며, 시민들과 대중들의 의견을 집적한 기구는 아니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그리고 5추협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5추협 위원들이 기념사업에 열의를 갖고 임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¹⁸

기념공동체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불만은 1993년 말부터 집단화되어 나타났다.¹⁹ 시민공청회를 주관한 단체들은 광주의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5월 성역화를 생각하는 시민연대모임>(이후 <5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으로 개칭)을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관주도의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²⁰ 이런 일련의 과정은 기념사업에 배제됐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광주민중항쟁의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연대의 주장과 대안은 1994년 4월 18일 <5·18 광주민

중항쟁 기념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가안)에 대한 워크숍>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됐다. 여기에서 무형의 기념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념사업이 세 공간(5·18묘지, 상무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미래의 광주시 도시공간 발전 구상에 이것들이 반영되어야 함이 지적됐다.²¹ 시민연대의 의견과 비판들 일부는 5·18묘지의 사업 과정에서 수렴됐으나, 이는 시민단체의 집단적 참여라기보다는 개인 연구자 혹은 외부 전문가로서의 참여였다. 그렇지만, 시민연대의 활동과 노력이 광주시로 하여금 종합적인 기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이라는 보고서가 생산됐다.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시민연대에서 활동하던 상당수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 포함됐다.

이제는 진지한 성찰과 대답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국가적 차원의 5·18 기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념사업의 주체, 즉 기념공동체의 구성 문제는 약 10년 이상 갈등과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구성된 기념공동체가 결과적으로 선정하고 승인해 조성한 5·18 기념공간과 기념물들이 과연 5·18의 역사

17 5추협의 성원은 1차 모임에서는 34명이었지만 이후 37명이 됐고, 15차 모임부터는 39명으로 확대됐다. 가장 일반적인 구성원의 숫자를 보이는 37명을 기준으로 보면, 5추협의 조직적 특성이 어떠한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광주 시장을 비롯해 시공무원이 7명이었고, 광주시의회 의원이 7명, 직접적 관련단체 대표가 6명, 언론인이 7명, 종교인이 3명, 학계·재야단체·법조계 등이 7명이었다. 5추협은 광주시 산하에 만들어진 비상설 조직으로 토론 사안이 생기면 소집됐지만, 기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며,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한편 5추협 구성원들은 각 조직 내에서 역할과 직책이 바뀌면, 이에 의거해 바뀌므로써 논의의 연속성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 구성원들은 각 단체들과 조직들의 책임자이거나 대표였지만, 의견 개진은 개별적 수준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18 1999년까지 5추협이 개최한 총 18차례의 회의 가운데 가장 높은 참석율을 보인 것은 제2차 회의로 86.5%였고, 가장 낮은 참석율은 제15차 회의로 51.3%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석율은 63.1%에 불과했다.

19 광주YMCA, 광주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울바른 오월성역화 사업을 위한 시민공청회 준비 모임>을 구성하고, 1993년 12월 9일 광주YMCA에서 <오월 성역화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 그 결과 5·18 아이디어 공모는 1994년 2월 15일까지 60일 연장되고, 기념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협의회 산하에 관련단체 주요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5·18 사업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2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월묘역 및 전적지는 역사적 장소성의 보존과 기억 및 추모의 공간으로, 도청과 도청 앞 광장은 5·18의 현재적 의미 해석과 연구 및 교육의 공간으로, 그리고 상무대 지역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광주의 모습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 의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가 새로운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광주도의 기념사업이었다는 비판은 다소 약화될지 모르지만, 명망가 집단 혹은 당사자 집단 중심의 기념사업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5·18 기념사업의 기념공동체가 결성되는 과정은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국가적 기념 대상이 되고, 기념공간이 조성된 것은 명백히 기억투쟁의 성과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은폐되고 왜곡된, 때로는 무기억 상태에 놓인 민중 저항의 역사가들이 공식적 기억의 지평으로 떠올랐고 공간 속에 표현했다. 직접적 피해자 집단과 저항공동체는 이렇게 조성된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상징물들과 기념공간들을 보면서 기억투쟁의 승리이며, 역사의 올바른 복원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국가의 이해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기억투쟁의 결과물이 기념공간과 상징물로 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국가의 이해는 민주화 이행기에 자신들의 정통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과 지역적 안배라는 측면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5·18에 대한 저항적 기억투쟁은 국가적 보상과 기념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중과 분리되기 시작했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종결됐다. 이것은 사실상 5월 운동이 종결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월 운동이 십여 년 이상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 피해자 집단들을 비롯해 재야단체 및 야당, 학생, 노동자, 농민, 및 종교단체 등이 기억투쟁에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쟁점으로 하는 5월 운동을 매개로 자신들의 희망과 미래를 앞당기고 찾고자 했다. 그런데 5·18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과 기념사업은 이렇게 하나였던 공동체를 분리시켜 놓았다. 광주 문제라는 해결 과제 특성상 이런 경향들은 피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미칠 영향과 효과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문제점을 무시해 안고 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5·18에 참여했고 5월 운동에 헌신했지만, 보상과 기념사업의 아무런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5·18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5·18을 오래 전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더 극단적인 경우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로서는 5·18을 계승해야 한다는 역사의식을 가질 근거가 더욱 희미해져갔다.

5·18 기념공동체는 이후 다른 민주화운동 혹은 국가폭력과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

들을 대상으로 기념공동체의 구성과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는 5·18 기념공동체가 민주화운동 기념공동체 가운데 처음 등장했고, 오랜 기간동안 전개된 기념공동체 구성을 위한 갈등과 합의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5·18 기념공동체의 문제점은 기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기됐지만, 이후 다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더욱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다. 더군다나, 전남도청 일대의 기념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념사업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수시로 다시 제기되곤 한다. 다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들에 비해 유독 5·18 기념사업에서 이런 평가들이 두드러졌던 것은 위에서 살펴본 과정들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5·18 기념사업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그만큼 컸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18 기념공동체에 관한 연구에는 앞으로 좀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5월 운동의 한 편린을 정리한다는 최소한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기념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제는 답해야 하지만 답하기 쉽지 않은 실천적 질문, 즉 “5·18 기념사업을 통해 획득한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답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

정호기 junghghg@hanmail.net |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 사회학 박사. 논저로는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제현 -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들을 중심으로」 외 다수.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1995. 『5·18묘역 성역화 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 _____, 1995.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
- 김영범, 1998. 『집합기역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화』,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99. 『집단화살과 집합기역: 그 역사화를 위해』, 『냉전시대 동아시아 양민화살의 역사』, 제주4·3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나간채, 1997. 『광주지역 5월 운동조직의 형성과 발전: 5·18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광주민중항쟁과 5월 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1994. 『오월성역화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민 활동 보고서』.
- 전남일보, 1994. 『5·18 광주기념사업을 위한 세계 민주성자를 가다』, 전남일보사.
- 전라남도, 1998.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
- 정근식, 1997. 『민주화와 5월 운동, 집단적 망달리테의 변화』, 『광주민중항쟁과 5월 운동 연구』, 전남대 5·18연구소.
- 정호기, 2001. 『5·18기념행사와 기념사업』,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 _____, 2002. 『기역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들을 중심으로』, 전남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Boyarin, J., 1994. *Space, and the Politics of Memory, Remapping Memory: The Politics of Time Sp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eleuze, G., 1966. *Le Bergsonisme*, PUF. (김재인 옮김, 1996. 『베르그송주의』, 문학과지성사).
- Harner, J. H., 1994. "Identity, Process and Reinterpretation: The Past Made Present and the Present Made Past," *Anthropos* 89. (최석영 옮김, 1996., 『아이덴티티, 과정, 그리고 재해석』,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 Hobsbawm, E. & Ranger, T.,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석영 옮김, 1996.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 Miles, M., 2000. *Art, Space and the City*, Routledge. (박삼철 옮김, 2000. 『미술, 공간, 도시』, 학교재).
- Winter, J., 1995.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